

# '그린 전남' 귀농·귀촌 인구 해마다 는다

환경이 깨끗한 전남에 새로운 터전을 잡는 귀농·귀촌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

13일 전남도는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에서 전남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은 3261가구 696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남으로 이주한 귀농인은 2009년 549가구를 시작으로 2010년 768가구, 2011년 1521가구, 2012년 2492가구가 늘어났고 2013년에는 3000가구를 넘어서 2009년 대비 6배에 이르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귀농인들이 전남을 선호하는 이유는 맑은 물과 오염되지 않는 땅,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수도권의 20% 이상 높은 일조량 등 천혜의 농업 환경 때문이다.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친환경농업이 결실을 맺어지면서 전남의 농업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것도 제2의 창업을 원하는 도시민들이 전남으로 이주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귀농 전 거주지를 보면 수도권이 1340가구(41.1%)로 가장 많고, 광주시도 1108가구가 3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가 2540

지난해 3261가구 6962명... 2009년 대비 6배

맑은 물·공기 등 천혜의 환경... 수도권 최다

가구(77.9%), 60대 이상 721가구(22.1%)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50대 이하의 젊은 도시민들의 귀농이 늘어나는 것은 최근 농촌에서 소득 작물 재배로 인해

역대 부농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농촌을 기회의 땅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남도 조영농업정책과장은 "귀농 홍보와 교육 등 귀농 마켓팅

을 강화하고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소득 작목 추천과 정착 교육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이나 다른 산업 종사자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전원생활과 요양을 위해 전남에 귀촌한 경우도 2012년 313가구에서 2013년 681가구 1249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광록기자 kroh@



전남 농촌지역에 한옥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대도시에서 이주해오는 귀농·귀촌 인구도 해마다 늘고 있다. 사진은 장흥 장동면 용곡마을 전경.

# 한-호주 FTA 가서명... 한국 車·호주 육류 수혜

이르면 내년 초 발효... 車·축산업계 희비 엇갈려

야당·농민단체, 피해대책 요구 등 반발 거셀 듯

한국과 호주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규모 3조 달러대의 FTA 발효가 초입기에 들어갔다. 양국은 올 상반기 중으로 정식 서명을 한 뒤 국회 비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면, 국회 비준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 초 한-호주 FTA가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과 농민단체가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등 반발도 거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호주 FTA에 가서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가서명된 한-호주 FTA 주요 내용은 상품, 원산지, 통관, TBT(기술무역장벽)/SPS(위생검역), 무역구제, 투자·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총 23개 챕터로 구성된다.

상품 분야에서는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다수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 75.2%, 수입액 기준 72.4%에 부과되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5년 내 이를 94.3%, 94.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호주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0.8%, 수입액 기준 86%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바로 없애기로 했다. 5년 뒤에는 관세 철폐율이 99.5%, 100%로 상향돼 한국보다 개방폭이 큰 편이다.

이 가운데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부품 포함), 가전, 철강, 석유 화학, 일반기계 등은 5%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경쟁력에 비해 유리한 시장 선점 조건을 갖추게 됐다. 자동차의 경우 호주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액의 76.6%인 1000~1500cc급 가솔린 소형차, 1500~3000cc급 가솔린 중형차, 1500~2500cc급 디젤차, 5t이하 디젤 화물차 등에 붙는 관세가 바로 철폐돼 이번 FTA의 가장 큰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또 수입액 23.3%의 나머지 자동차 품목과 자동차 부품은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수입 품목수 기준 61.5%는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다만 쌀을 비롯한 579개 품목(38.5%)은 관세 철폐

를 10년 이상 유보하거나 양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한-EU FTA(12.3%), 한-EU FTA(14.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냉동 삼겹살은 양허 제외하고 나머지 부위는 10년 뒤 관세가 사라진다. 닭고기는 10~18년 사이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수산물도 수입 품목 수 기준 90.3%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고 9.7%(43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 유보 또는 양허 제외했다. 양허 제외 품목은 전복, 명태, 굴 등이다.

한-호주 FTA가 발효까지 8부 능선을 넘었지만 갈 길도 멀다. 이번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업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조호근·전남도의회 김재우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13일 세종시 베어트리파크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회장협의회(회장 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 임사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 전국시도의회회장協 'AI 방역 대책·유류유출 보상 촉구'

전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회장 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는 13일 세종시 베어트리파크에서 임사회를 열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의회회장협의회는 결의문에서 "2003년 이후 2~3년 주기로 AI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AI의 확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근본대책으로 ▲각종 가축전염병 관리를 총괄·자문하는 전문기구 설립 ▲열악한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 현대화사업 조속 시행 ▲AI 바이러스 유입의 원인으로 꼽히는 철새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대책 조기 마련 ▲닭·오리 소비 확대 등의 추진

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우이산호 총돌 유류 유출사고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채택했다.

협의회는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 피해어민에 대한 선보상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전남 농민단체 '농산물 최저가 보장 조례' 주민 발의

추진본부 결성 서명운동 돌입... 재원 확보 관건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13일 '전남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지원조례'를 주민 발의하기 위해 청구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맹, 통합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전남도청에서 '최저가격 보장조례' 청구취지를 공표했다.

최저가격 보장조례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결정에 농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전남도가 그 차액을 면적에 비례해서 보전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일 전남도에 이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 청구서를 접수한 농민단체당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전남도청에서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벼와 보리 등 작물에 따라

접 참여하고,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전남도가 그 차액을 면적에 비례해서 보전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일 전남도에 이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 청구서를 접수한 농민단체당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전남도청에서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벼와 보리 등 작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차액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최저가격 보장 등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 광주·전남연맹의 한 관계자는 "농민들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최저가격 보장 조례제정을 통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전남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대안으로 삼겠다"고 조례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권익위, 지자체 연구용역 실명공개 의무화 추진

지자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진행됐던 지자체의 학술연구용역에 제동을 걸었다.

권익위는 13일 "지자체가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연구자의 실명 등 상세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권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지자체가 용역과제 이행자의 실명과 연구결과 전문 등 상세 정보를 정부의 정책연구정보서비스 포털(프리즘)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학술용역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평가하는 심의회 구성에서

외부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전문가의 의견취취 절차를 도입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계약자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유사하거나 연관성 있는 과제는 한 기관으로 통합해 발주하도록 했다. /오광록기자 kroh@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13(226-총-52297호)

#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뢰내용 노안리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기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트렌즈

밝은광주안과

##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엔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엔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2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

##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탁이 바뀔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탁

공동본점 | 227-4474  
금호지점 | 383-4474  
중앙지점 | 653-4474